

광주신세계 카드 서울서 1000억 쇼핑...송정 떡갈비집은 호황

광주~서울 SRT 1년 변화상
수도권 병원 지역환자 유치 분주
송정역 일대 호텔 속속 문 열어
송정역시장 관광객 몰려 명소 부상

1시간 29분 만에 광주~서울을 주파할 수 있는 SRT 개통으로 광주신세계백화점 고객이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역의 유출이 사상 첫 1000억 원대 돌파를 눈 앞에 두는 등 광주·전남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관광객이 더 빠르게 광주·전남을 찾게 돼 광주 송정역 주변에는 이들을 겨냥한 비즈니스호텔의 건립이 붐을 이루는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역의 유출 현실화=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신세계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서울 등지에서 쇼핑을 한 금액이 989억원에 달했다. KTJ 개통 등으로 백화점 고객의 수도권 역의 유출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 백화점 고객의 수도권 역의 유출이 95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SRT 개통 첫 해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백화점 카드의 다른 지역 사용을 늘려야 하는 것은 교통 변화에 따른 역의 유출 현상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고객의 상품 구입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소비자들은 신세계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의 25%가량을 추가로 현금이나 다른 백화점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소비자들이 서울 등지에서 쇼핑을 하면서 광주신세계백화점 카드 이외에 추가로 사용한 현금 등을 포함한다면 SRT 첫 해 이 백화점 고객의 역의 유출은 1250억원대가 된다는 뜻이다.

유동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 의료계도 광주·전남 환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RT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수서역과 자신들의 병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각각 5대, 2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시험 등을 준비하는 일부 수험생도 서울 유명 논술학원 통학을 위해 SRT를 이용하는 등 SRT 개통은 지역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역 발전 계기로 삼아야=SRT 개통으로 가장 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은 광주송정역 일대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이어 SRT까지 운행이 시작된 이후 광산구 송정동과 소촌동 일대에 3곳의 비즈니스 호텔이 새로 문을 열었으며, 송정동 일대 유명 떡갈비 집은 연일 호황을 노리고 있다.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소촌동 영광동사거리와 광산구청 뒤편 등지에 문을 연 이들 호텔의 40~70%가량의 객실 고객은 광주송정역 이용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송정역 맞은 편 1913송정역시장 인근에도 5층 규모의 호텔 건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RT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맛집 탐방 동호인이나 관광객들의 광주행 SRT 탑승도 늘고 있다. 광주송정역 인근의 1913송정역시장이 전국 관광객 명소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송정 떡갈비 등 광주지역 음식을 먹은 뒤 당일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를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와 순천이 유명 관광지였지만 SRT 역시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 재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맛집과 숙소를 연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도권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자 웃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 에너지 제로(EZ) 주택 오픈 하우스’ 행사 도중 임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원인 더불어민주당 원석 원내대표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 공공공간 ‘사유화’ 더는 안된다

<공중>



공간 균형 무너진 광주

<3> 고층화 제어시스템 시급

광주 전역에 들어서고 있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규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독주택, 상업시설, 녹지 등을 고층·초고층 아파트가 잠식하면서 도시 공간의 균형이 붕괴돼 획일적인 ‘회색’이 광주를 뒤덮고, 특정구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주거지 양극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도시·건축 행정이 아파트의 고층·초고층화를 제어하지 못해 결국 토지 가치의 상승분을 토지소유주와 건설업체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파트 부지가 희소해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더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계를 선정하는 등 도시 공간의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경관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도시·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함)을 그대로 보장하기보다는 도시 전체의 경관과 개발대상지의 여건, 주민의 재정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층 아파트 도시문제 주범

용적률 인센티브·용도 변경 근절

건축 높이 제한 규제 서둘러야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접근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을 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토지소유자나 건설업체가 이 용적률을 높이면 혈안이 돼 있다보니 대부분 이 제한선에 근접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관례가 돼버렸다.

공공성, 지역발전 기여 등 새로운 조건을 부과해 고층·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조례에서 보장하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도시·건축행정이 기술적 공무원, 일부 전문가 등의 전유물이 아니며, 도시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형성돼 갈 것인지에 대해 지역주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도시·건축행정에 보다 높은 투명성,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이후 도시 공간에 대한 규

제 완화가 주차단, 지정제, 고층화 등을 조려했다는 점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 높이 제한 등 새로운 규제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 경우 업무지역은 제한적으로 50층까지 허용하지만, 재건축아파트의 최대 높이를 35층으로 설정해 도시 과밀과 미관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 역사성,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지속성(친환경) 등을 중시하고 있다.

광주의 무분별한 고층·초고층 건물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대응 능력이 취약해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집단적인 고층건물의 건립은 도심 공기유동을 차단해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주 전체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도시·건축에 접목시키고, 원도심 재생 등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대규모 공급 위주로 작성된 상업·주거·녹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재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순미 건축사는 “천연물질적으로 20~40층의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심각한 도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에는 낮은 수준의 적절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윤만 창출하는 방식의 고층·초고층 아파트 공급으로 광주가 무질서와 혼돈이 난무하는 뒤죽박죽의 도시, 특색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ychadol@kwangju.co.kr

靑 “특별사면 한다면 연말보다 연초 될 것”

청와대는 올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연말보다는 연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면 외에 사국사면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전에서 제기된 한상근 민주노총위원장과 쌍용차

동차 사태 수감자, 통합진보당 사태 수감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신속한 수사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폐 청산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불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확대해석을 차단하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에 불만이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00년 수령 소나무 숲, 그 향기 그윽한 그린장례문화원!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예(禮)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 저렴한 장례비용, 소문난 음식 맛, 실시간 정산 시스템
2. 고객님이 찾기 쉽고, 주차가 편리한 대형주차장 완비
3. 감동적인 의전과 고급 호텔수준의 명품장례식장
4.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그린장례문화원

전속모델 신구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대표 김명관 회장

예기치 못한 사고시 그린을 이용하시면, 그린장례문화원의 경조위로금과 특별의전으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